

光州日朝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3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93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10일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인프라 부족·우수 인력 떠나···산학 연계 시스템 강화를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나

〈4〉 광주·전남 기업 유치 어려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 광역·기초단체들이 앞 다퉈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내 총생산 등 지역 경제지표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이 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는 이유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기업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 벽'을 넘 지 못하면서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대기업들이 사회기반시설이 미흡한 지방으로의 이전 계획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교통·물류 등 사회간접자 본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젊 고 우수한 인력이 수도권 등지로 빠져나가면서 인 력 확보에 어려움도 있어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 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지역에 우수한 인 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시스템 등도 더 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산업 중심 투자유치에 조례개정까지 '혼신의 힘'=광주시는 지난 민선 7기부터 신산업 분야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이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과 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및 주력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결과 광주시는 2020년 52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고,이 가운데 50%인 26개 기업이 투자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다. 2021년에는 58개 기업이 광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줘도 교통·물류 '지방의 벽' 못 넘어 기업도시 여건 먼저 갖춰야

주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협약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개 기업만이 투자 완료 및 투 자를 진행중이다. 지난해는 29개 기업이 투자협약 을 했지만, 2개 기업만이 투자를 진행하는 등 직접 투자로의 연결이 미진하다.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들이 광주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대로 투자협약을 진행했지만, 지리적 여건과 인재 풀 등의 이유로 투자 진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리적 여건, 교통 인프라 등 열 악한 기업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투 자유치 전략을 바꿔 조례에 담았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 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괜찮은 일자리 창 출은 힘들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턴기업에도 신·증설을 허용하게 된다. 전남도가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다.

◇사회기반시설·인력 확보 등 인프라 부족은 여전한 '걸림돌' =지난해 전경련이 국내 매출액 상위기업 1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4%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시간·비용 증가 등교통・물류 애로(23.7%)와 인력 확보난(21.1%)을 꼽았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기반시설이 잘 갖춰



30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취업정보 게시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진데다, 인력 풀까지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굳이 지방 이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전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대전·세종·충청권이 55.3%로 과반을 차지했고,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16.4%였다. 반면, 광주·전라지역은 6.6%에 그쳤다.

지난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연지역경제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 지역내총생산 (GRDP)과 초등학교·학원 수, 병원 병상 수, 평균 공시지가, 고속철도(KTX)역과 거리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이주 매력도'를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광주와 전남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내 총생 산이 지역 매력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지적했다.

◇해결 과제=세재 혜택·금액보조 등의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다. 지원금액보다는 기업이 등지를 틀고, 우수 인력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우선되는 기업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 산학연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고품질 시설, 효율적 인프라 등 지역 내외부 투자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입증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의회부터 기업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재 투자자를 파악해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꼭 봐야할 킬러콘텐츠 많다"

노관규 순천시장 인터뷰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 람회'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생태와 환경 을 테마로 미래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콘텐츠가 다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노관규 순천시장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커다란 도시 계획의 틀 속에서, 정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열렸

던 정원박람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과 시대 의 정원 트렌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30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도심 일대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장에는 국내외에서 찾아올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을 콘텐츠가 가득하다.

우선,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 재해예방시설로만 기능했던 저류지가 사계절 잔디광장으로 바뀌어 선보인다. '오천그린광장'으로 이름 붙인 잔디관 장은 도심 속 시민들의 품격 있는 문화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2월 4일 오후 1시 성공개최를 위한 '붐UP 페스타'를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도심 속 강을 따라 배를 띄워 국가 정원과 도심을 둘러보면서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도록 정원제험선도 운영된다.

드넓은 정원에서 유명 셰프의 음식을 맛보고 별을 감상하며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 것으로 보인다. 가든스테이는 정원·문화·음식·힐링이 어우러진 신개념 숙박 프로그램으로, 조직위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미쉐린스타급 셰프를 통해 지역로컬푸드만으로 만든 요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순천=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1800억 긴급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 출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 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 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 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 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 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